"모평 대비 수능등급 상승률 10% 이상… 실전 감각 키워야"

진학사, 지난해 수험생 성적 분석
재학생이 졸업생보다 변화 폭 커
"자신의 가능성 제한할 필요 없어"

〈2026학년도 9월 모평 대비 수능 등급 변화 비교〉 /진학사

영역	재학생 등급 변화			졸업생 등급 변화			등급상승비율차이 (재학생·졸업생)
	상승	유지	하락	상승	유지	하락	
국어	22.20%	36.50%	41.30%	15.60%	34.20%	50.10%	6.6%p
수학	24.30%	43.30%	32.40%	17.90%	40.50%	41.60%	6.4%p
영어	16.10%	43.90%	40.00%	12.70%	39.90%	47.40%	3.4%p
탐구	25.00%	35.70%	39.30%	15.80%	34.50%	49.70%	9.2%p
국수탐 평균등급	16.90%	49.80%	33.20%	9.80%	44.80%	45.40%	7.1%p

※ 대상은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와 수능 성적을 모두 진학닷컴에 입력한 수험생(재학생 16,977명, 졸업생 7,754명)
※ 탐구는 2과목 평균등급을 적용했으며, 국·수·탐 평균등급은 국어·수학·탐구(2과목 평균) 등급을 평균해 산출함.
※ 반올림으로 합계가 100%와 다를 수 있음.

현행 체제 마지막 수능에 N수생이 몰리며 고3 수험생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9월 모의평가 대비 수능에서 등급이 상승한 비율은 재학생이 졸업생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업계는 수시 마무리 후 학습 몰입도가 높아지는 만큼, 남은 2주간 실전 감각을 끌어올린다면 고3의 막판 반등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5일 입시정보업체 진학사가 2026학년도 수험생 2만4731명(재학생 1만6977명·졸업생 7754명)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 9월 모평대비 수능에서 국어·수학·탐구 평균등급이 오른 비율은 재학생이 16.9%로 졸업생(9.8%)보다 7.1%포인트(p) 높았다. 등급이 유지된 비율도 재학생은 49.8%로 졸업생(44.8%)보다 높았으며, 등급이 하락한 비율은 재학생 33.2%, 졸업생 45.4%로 집계됐다.

주요 과목 전반에서 재학생의 등급 상승 비율이 졸업생을 웃돌았다. 탐구 2과목 평균등급을 기준으로, 재학생의 25.0%가 9월 모평보다 수능에서 등급을 올렸다. 졸업생은 15.8%로 9.2%p 격차를 보였다. 국어는 재학생 22.2%, 졸업생 15.6%, 수학은 재학생 24.3%, 졸업생 17.9%로 나타났다. 절대평가인 영어 역시 재학생의 상승 비율이 16.1%로 졸업생(12.7%)보다 3.4%p 높았다.

같은 등급을 받은 수험생끼리 비교한 결과도 비슷했다. 9월 모평 등급별로 실제 수능에서 한 등급 이상 상승한 비율을 비교한 결과, 국어·수학·영어 2~4등급 구간에서 모두 재학생이 졸업생을 앞섰다. 단순히 두 집단의 전체 성적 분포가 달라 나타난 결과만은 아니라는 의미다.

수학에서 격차가 두드러졌다. 9월 모평 3등급을 받은 재학생 중 수능에서 등급이 상승한 비율은 28.7%로 졸업생(23.0%)보다 5.7%p 높았다. 4등급에서도 재학생은 34.2%, 졸업생은 28.8%로 5.4%p 차이를 보였다. 수학 2등급에서도 재학생의 상승 비율이 18.3%로 졸업생(16.7%)과 1.6%p 차이가 났다.

국어 역시 2등급은 재학생(19.7%)이 졸업생(15.7%)을 웃돌았다. 3등급과 4등급에서도 재학생의 상승 비율이 각각 23.1%, 28.8%로 졸업생(19.2%, 25.0%)을 앞섰다.

고3 재학생의 성적이 반등한 배경으로는 9월 모평 이후 달라지는 수험 환경이 꼽힌다. 진학사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수시 원서접수를 마친 고3 재학생은 수능 공부에 집중할 여건이 커지는 반면, 졸업생은 상대적으로 학습 환경의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N수생의 강세가 곧 재학생의 성적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남은 기간 자신의 가능성을 미리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수능까지 남은 2주 동안은 기존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우 소장은 "반복해서 틀리는 유형과 시간 관리 문제를 점검하고, 실제 수능 시간표에 맞춰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상보다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의 대응 방법도 미리 연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수정 기자

kcrystal@metroseoul.co.kr

교부금 개편 시각차 여전… "교부금 늘 것"〈교육부〉 vs "재원 부족"〈시·도 교육감〉

교육감協 "내국세 연동제 유지"
교육부 "학생 수 변화 등 고려"

학생 수 감소를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두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감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감들은 학교의 필수 교육 수요를 감당할 재원이 부족하다며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는 대안을 내놨다. 반면 교육부는 개편 이후에도 교부금이 증가한다며, 개편으로 마련한 재원은 재투자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안 발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겸 서울시교육감, 강은희(대구), 권순기(경남), 김석준(부산), 윤건영(충북), 임종식(경북), 조용식(울산) 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면서 세수 변동에 따른 재정 부담을 국가와 나누는 '교육재정 상생안'을 제안했다.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분하는 현행 연동률은 유지하되, 세수가 크게 늘거나 줄 때 국가가 일부 재원을 분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내국세가 전년보다 5%를 초과해 증가하면 교부금의 5% 초과 증가분 중 3분의 2를 국가 미래대응 재원으로 활용하고, 5% 넘게 감소하면 교부금의 5% 초과 감소분 중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안 발의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 방안을 적용하면 내년 교부금은 약 89조6000억원으로, 시·도 교육청이 제시한 최소 필요액 88조4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어 정부가 지방교부세의 내국세 연동 방식은 유지하면서 교부금의 연동 방식만 폐지하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올해 세수 증가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교부금 정산분 11조7000억원이 개편 과정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이에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정액이든 정률이든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과 예산을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부금 개편이 교육예산 삭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2026~2030년 교부금이 정부 중기계획 기준으로 연평균 6.6% 늘어, 기존 중기계획(4.4%)보다 증가세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향후 10년간 학령인구가 약 192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학생 수 변화와 함께 교부금 증가 추이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마련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계정에 적립해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우수인재 양성 등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정 기자

임시형 국민대 교수 '기계의 날' 장관 표창



국민대학교 임시형 교수(사진)가 극한환경에 투입되는 로봇 분야에서 거둔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국민대는 기계공학부 임시형 교수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6 기계의 날' 행사에서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기계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 임 교수는 마이크로·나노 기술을 활용한 기능성 표면과 초소형 센서 연구를 통해 기계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임 교수는 "산·학·연 협력을 확대해 연구 성과가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극한환경 로봇에 적용할 기능성 표면과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초감각 센서의 기초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서울교육청, 내년 예산안 11조8014억 편성

올해 본예산 대비 7.9% 증가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예산안에 학생 마음건강과 기초학력 지원, 인공지능(AI) 교육, 노후 학교 공간 개선 등을 담았다. 전체 예산안은 11조8014억원 규모로, 학생 안전과 학교 현장 지원부터 미래교육 기반 조성까지 주요 교육사업에 재원을 배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7년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11조8014억원을 편성해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 11조9422억원보다 8592억원(7.9%) 늘었지만, 최종예산 12조8665억원과 비교하면 1조651억원(8.3%) 줄었다.

주요 사업 예산으로 총 1조607억원을 책정했다. 학생 마음건강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4605억원, 기초학력과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에 1784억원, 진로·체험 활동과 미래교육 기반 마련에 4218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AI·디지털 교육 분야는 모두 740억원으로, AI·디지털교육 지원에 567억원, 디지털 학습 인프라 구축에 173억원을 배정했다. 다만 학생용 디지털 학습기기인 '디벗' 교체 예산은 이번 예산안에서 제외했다.

학교 공간 개선과 유휴시설 활용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노후 학교를 미래형 교육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에 2875억원, 에너지 자립형 생태전환학교인 '햇빛이음학교' 조성에는 37억원을 책정했다. 폐교를 활용한 시니어 평생교육시설 '슬로우캠퍼스' 조성에도 32억원을 지원한다.

예산안은 다음 달 23일까지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김수정 기자

서울교육청, 학교 재난 피해보상 강화

내년 교육시설공제 운영계획 마련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재난 피해 보상과 행정 업무를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7년도 교육시설공제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학교의 재난 피해 보상과 복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5일 밝혔다. 교육시설공제는 학교 시설과 물품 등에 재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 5년간 서울 지역 학교가 신청한 재난 피해 공제 급여는 약 165억6000만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약 102억4000만원으로 신청액의 61.8% 수준이었다. 학교 업무 담당자 설문에서는 68.9%가 공제 업무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개선안은 가입 정보와 실제 학교의 자산 현황이 일치하지 않거나 보상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생기는 문제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물품 가입 기준은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300만원 미만 물품에는 포괄 특별담보를 적용해 가입하지 않은 물품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재난이 발생한 피해 학교에는 단계별 지원을 진행한다. 사고 초기에는 공제 급여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신청 준비 단계에서는 피해 내역과 증빙자료 관련 상담을 제공한다.

보상 과정에서는 복구비 산정과 지급액 감액 사유 확인 등을 지원한다. 학교와 교육지원청, 본청이 가입 내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 매뉴얼 개선에 반영하는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수정 기자

인하대, 전공박람회 성료

인하대는 지난 3~4일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60주년기념관에서 '2026 전공박람회'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전공디자인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학생이 여러 전공을 살펴보고 적성과 진로에 맞춰 학업 계획을 짜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일반 학과를 비롯해 복수전공·부전공·연계전공·융합전공의 특성과 교육과정, 졸업 후 진출 분야 등을 소개했다.

학생들은 여러 전공의 수업 내용과 진로 방향을 비교하며 관심 분야를 탐색했다.

인하대 전공디자인센터는 박람회 이후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공 상담 신청을 받는다. 학생들이 전공 선택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학업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상시 상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수정 기자